

# 보건복지 ISSUE & FOCUS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분포 변화<sup>1)</sup>



이원진 소득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소득 및 비소비지출 데이터를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한 후 이를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행정 자료 보완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행정 자료 보완 작업이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 보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사실을 의미함.

### 01. 들어가며

#### ◆ 한국의 소득분배지표 통계 및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현황

- 통계청은 2016년 이전까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해 왔음.
  - 가계동향조사는 주로 고소득층 누락 또는 소득 과소 보고 등의 이유로 현실의 불평등을 과소 추정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김낙년, 2012a, 2012b; 김낙년, 김종일, 2013; 이원진, 구인회, 2015; 홍민기, 2016, 2017).
  - 2012년에 시작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로 산출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가계동향조사의 공식 통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논란이 되었음(통계청, 2013, pp. 1-3).

1) 이 글은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201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 2017년 12월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 데이터가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행정 자료를 이용해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되었음(통계청, 2017a, p. 2).
  -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소득 및 비소비지출 데이터를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음(통계청, 2019b, p. 31).
  - 이하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서베이로 조사된 소득 데이터를 '조사 데이터', 행정 자료를 활용해 조사 데이터를 보완한 소득 데이터를 '행정 보완 데이터'로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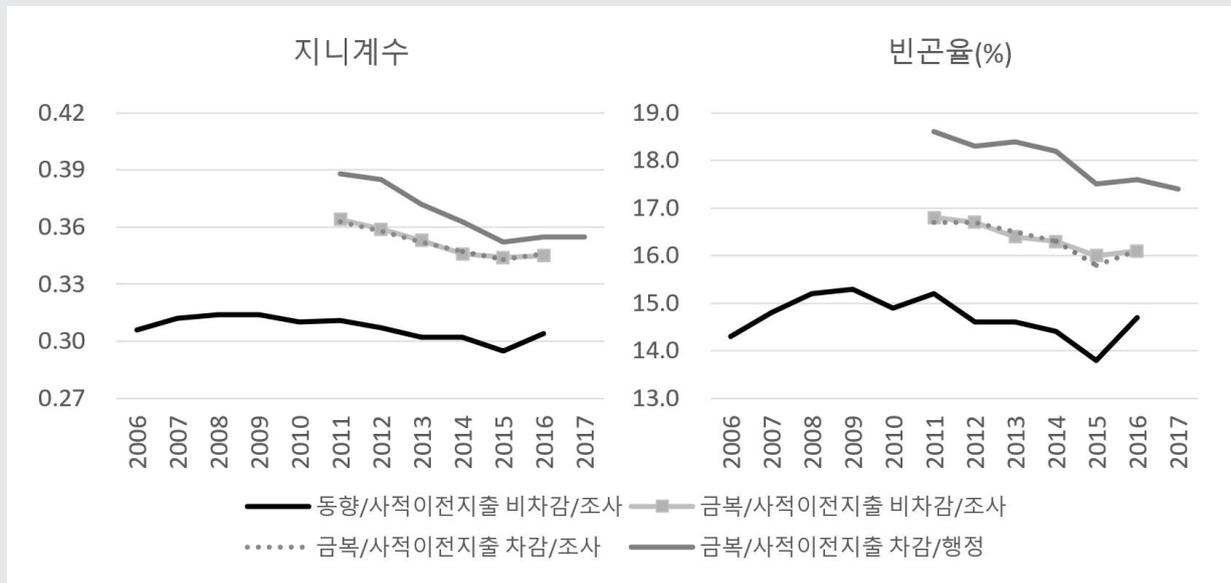
####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지표 시계열 단절 양상(그림 1)

- 과거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와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음.
  - 첫째,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의 차이. 2016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데이터 변경이 지니계수를 0.304에서 0.345로, 빈곤율을 14.7%에서 16.1%로 증가시킴(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가처분소득 기준).
  - 둘째, 가처분소득 개념의 차이.<sup>2)</sup> 사적이전지출 차감 여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개념 차이는 소득분배지표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 기준).
  - 셋째,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의 차이. 2016년의 경우 행정 자료 보완이 지니계수를 0.346에서 0.355로, 빈곤율을 16.1%에서 17.6%로 증가시킴(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
- 즉, 과거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와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의 차이는 주로 데이터 변경과 행정 자료 보완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음.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에 따라 과거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는 경상총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소득을,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는 경상총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와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소득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함.

[그림 1]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추이, 2006~2017년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값임.  
 • 동향/사적이전지출 비차감/조사: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가처분소득/조사 데이터, 통계청이 작성한 소득분배지표를 인용하였음.  
 • 금복/사적이전지출 비차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가처분소득/조사 데이터, 원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 금복/사적이전지출 차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조사 데이터, 원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 금복/사적이전지출 차감/행정: 가계금융·복지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행정 보완 데이터, 통계청이 작성한 소득분배지표를 인용하였음.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2) 통계청. (2019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3)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 이 글의 목적

-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행정 자료 보완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sup>3)</sup>
  - 통계청은 2017년(조사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한해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음(통계청, 2017b).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의 비교·분석 결과는 이원진 외(2019)의 4장을 요약한 것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데이터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는 이원진 외(2019)의 3장을 참고하기 바람.

## 0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행정 자료 보완 방법

###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 자료 보완 방법

- 통계청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소득과 비소비지출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과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 연계한 후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한 소득과 비소비지출 데이터를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완하였음(통계청, 2019b, pp. 31-34).
- 큰 틀에서 조사 대상 소득과 개념이 유사한 항목에 대해 행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세부적으로는 <표 1>과 같이 소득 항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른 보완 기준을 적용하였음.

**<표 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행정 자료 보완 기준**

항목	항목별 보완 기준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방향) 행정 자료로 조사 자료 대체 보완</li> <li>• (예외 사항) 행정 자료 기준으로 과세 미신고 금액 이하인 경우,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국세청 미신고 소득에 대한 정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분류 차이에 따른 중복으로 추정되는 경우(행정 자료에는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데, 조사 자료에는 반대인 경우)는 조사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구 단위 소득의 정확성 확보</li> </ul> </li> </ul>
사업소득 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방향) 기본적으로 조사 자료를 사용하나, 무응답인 경우는 행정 자료로 보완</li> <li>• (고려 사항) 가구원 간 사업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 단위에서 보완</li> </ul>
금융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방향) 행정 자료로 조사 자료 전면 대체 보완</li> <li>• (예외 사항) 소수의 빌려준 돈이 있는 경우는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 중 큰 금액 사용</li> </ul>
공적이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방향) 행정 자료로 조사 자료 전면 대체 보완</li> <li>• (해당 항목)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li> <li>• (예외 사항) 양육수당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미입수로 두 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li> </ul>
비소비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방향) 행정 자료로 조사 자료 전면 대체 보완</li> <li>• (해당 항목) 소득세, 공적연금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개 연금)</li> </ul>

자료: 통계청. (2019b).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7. 7. 인출. p. 34.

## 03.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행정 자료 보완의 영향

### ◆ 분석 개요<sup>4)</sup>

- 2016년 소득을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비교함.

.....

4) 이 글의 표와 서술에서는 수치의 합·차이·비율 등을 반올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후 반올림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반올림하여 보고한 개별 수치의 합·차이·비율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하의 분석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음수는 0으로 변환)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음수는 0으로 변환)

〈표 2〉 조사 데이터·행정 보완 데이터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조사(A)	행정(B)	C=B-A	C/A(%)	조사(A)	행정(B)	C=B-A	C/A(%)	
평균(만 원/년)	2915	3195	+280	+9.6	2723	2981	+258	+9.5	
10분위 경계값 (만 원/년)	P10	624	696	+72	+11.6	882	922	+40	+4.5
	P20	1270	1286	+16	+1.2	1316	1369	+53	+4.0
	P30	1700	1772	+72	+4.3	1684	1783	+100	+5.9
	P40	2079	2214	+135	+6.5	2007	2155	+148	+7.4
	P50	2477	2652	+175	+7.1	2336	2550	+214	+9.1
	P60	2900	3165	+265	+9.1	2689	2971	+282	+10.5
	P70	3464	3745	+281	+8.1	3173	3485	+312	+9.8
	P80	4158	4568	+410	+9.9	3766	4175	+409	+10.9
	P90	5400	5911	+511	+9.5	4742	5281	+540	+11.4
지니계수	0.390	0.402	+0.012	+3.2	0.346	0.355	+0.009	+2.7	
빈곤율(% , %p)	17.9	19.8	+1.9	+10.7	16.1	17.6	+1.5	+9.1	

주: '조사'는 조사 데이터, '행정'은 행정 보완 데이터를 의미함.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 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지표는 모두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17b),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시장소득·가처분소득 변화(표 2)

- 행정 자료 보완은 대체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규모를 증가시킴.
  - 시장소득 평균이 9.6%, 가처분소득 평균이 9.5% 증가하였음.
- 행정 자료 보완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규모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함께 증가시킴.
  - 가처분소득 P10의 증가율은 4.5%에 그쳤지만 P50~P90은 9.1~11.4%나 증가하였음.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6에서 0.355로, 빈곤율은 16.1%에서 17.6%로 증가하였음.
  - 시장소득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과 유사하게 P20~P50보다 P60~P90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특이하게도 가처분소득과 달리 P10의 증가율이 11.6%로 가장 높은 현상이 관찰됨. 이는 서베이에서 시장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이 행정 데이터를 통해 일정하게 포착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됨.
  -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각각 0.390에서 0.402, 17.9%에서 19.8%로 증가하였음.

###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원천 변화(표 3)

- <표 3>에서는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개인 ID로 연결하여 소득 원천별 행정 자료 보완 패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
- 행정 자료 보완 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가구도 일부 존재하지만(24.8%), 절반에 가까운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41.1%),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일부 가구의 근로소득이 새로 포착된 결과(5.4%) 근로소득 평균이 연 3281만 원에서 3499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사업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 데이터로 사업소득이 새롭게 포착된 11.3%의 가구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은 대체로 행정 자료 보완 후에 조사 데이터가 유지되었음.
- 행정 자료 보완 후 재산소득 평균은 연 212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금융소득 조사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 데이터를 통해 금융소득이 추가된 가구의 비율이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금융소득 평균이 연 29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426.9%나 증가하였음.
- 공적이전소득을 받았지만 서베이에서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9.4%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공적이전급여액을 좀 더 정확하게 보완한 결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비율이 35.1%, 감소한 비율이 9.9%로 나타났고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연 297만 원에서 328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여러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에서 무응답 보완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지만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였고 이를 보완한 결과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이 연 8만 원 증가하였음.
  - 공적연금 역시 행정 자료 보완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행정 자료 보완 후 공적연금이 증가한 비율이 16.6%, 감소한 비율이 6.7%로 나타났고 공적연금 평균은 연 16만 원 증가하였음.
  - 그 밖의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행정 자료 보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특히 기초연금은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의 평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원천 변화

(단위: 만 원/년, %)

구분	평균				0→0 초과 비율	증가 비율	감소 비율	유지 비율
	조사(A)	행정(B)	C=B-A	C/A(%)				
근로소득	3281	3499	+218	+6.6	5.4	41.1	24.8	34.1
사업소득	1149	1217	+68	+5.9	11.3	14.1	0.0	85.9
재산소득	212	353	+142	+66.9	62.0	82.0	3.1	14.8
금융소득	29	154	+125	+426.9	72.9	82.0	3.2	14.8
임대소득	170	187	+17	+9.9	0.8	1.1	0.0	98.9
공적이전소득	297	328	+30	+10.2	9.4	35.1	9.9	55.1
공적연금	176	192	+16	+9.2	4.8	16.6	6.7	76.6
기초연금	55	55	-0	-0.0	1.2	11.1	2.8	86.1
양육수당	9	13	+4	+41.7	2.9	4.6	0.0	95.4
장애수당	7	5	-2	-29.2	0.5	1.6	1.3	97.1
기초보장급여	20	24	+5	+22.7	0.9	3.2	1.4	95.4
근로·자녀장려금	2	10	+8	+359.8	9.0	10.2	0.7	89.1
공적이전지출	547	614	+67	+12.3	0.2	42.2	40.6	17.3
소득세	176	246	+70	+39.5	15.6	41.6	37.5	20.9
국민연금기여금	127	120	-8	-6.0	5.6	28.1	36.8	35.1
기타 연금기여금	27	32	+5	+19.1	1.0	4.7	3.2	92.0

주: '조사'는 조사 데이터, '행정'은 행정 보완 데이터를 의미함. 비균등화 가구 소득의 가구 단위 분포임.

- 0→0 초과 비율: 조사값이 0원이고 행정 보완값이 0원 초과인 비율을 의미함.
- 증가/감소 비율: 조사값보다 행정 보완값이 큰/작은 비율을 의미함.
- 유지 비율: 조사값과 행정 보완값이 동일한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7b).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변화(표 4)

- 가장 규모가 크고 행정 자료 보완의 영향도 크게 받는 소득 원천은 근로소득임. 〈표 4〉에서는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변화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았음.
- 가구 근로소득을 가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이 30.0%에서 24.5%로 5.4%포인트 감소하였음.
  -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 데이터로 근로소득이 새롭게 포착된 가구가 주로 연간 2천만 원 미만 구간으로 유입되면서, 행정 자료 보완 후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과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각각 4.1%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하였음.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미만 중간소득 구간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8천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 개인 근로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됨.
  - 연간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이 8.5%포인트 감소한 대신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과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각각 7.6%포인트, 2.4%포인트 증가하였고 중간소득 구간인 2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미만 비율은 감소, 6천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표 4〉 조사 데이터·행정 보완 데이터의 근로소득 구간별 비율

(단위: %, %p)

구분(연간)	가구 근로소득			개인 근로소득		
	조사(A)	행정(B)	B-A	조사(A)	행정(B)	B-A
0원	30.0	24.5	-5.4	63.5	55.0	-8.5
~1천만 원 미만	5.9	9.9	+4.1	4.9	12.5	+7.6
~2천만 원 미만	10.1	12.3	+2.2	8.8	11.2	+2.4
~4천만 원 미만	19.9	19.0	-0.8	12.7	11.3	-1.4
~6천만 원 미만	14.3	13.2	-1.1	5.3	4.9	-0.4
~8천만 원 미만	8.9	8.8	-0.1	2.6	2.8	+0.1
~1억 원 미만	5.0	5.2	+0.1	1.1	1.2	+0.1
~2억 원 미만	5.6	6.6	+0.9	0.9	1.1	+0.2
2억 원 이상	0.3	0.5	+0.2	0.1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는 조사 데이터, '행정'은 행정 보완 데이터를 의미함. 가구 근로소득은 비균등화 가구 소득의 가구 단위 분포이고, 개인 근로소득은 비균등화 개인 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자료: 통계청. (2017b).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분배지표 변화(표 5)

- 〈표 5〉에서는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개인 ID로 연결한 후 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개별 소득 원천의 조사값을 행정 보완값으로 대체한 가상적인 가처분소득의 분포를 분석하였음.
  - 예를 들어 다른 모든 항목에는 조사값을 사용하고 근로소득만 행정 보완값을 사용하여 구성된 가처분소득의 분포와 실제 가처분소득 조사값의 분포를 비교하면 근로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이 가처분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을 함께 증가시킴.
  - 가처분소득 평균이 연 2723만 원에서 2873만 원으로 149만 원 증가하였음.
  -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각각 0.346에서 0.367로, 16.1%에서 18.9%로 크게 증가하였음.
-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 평균을 각각 연 44만 원, 87만 원 증가시켰지만,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공적이전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 평균을 연 19만 원밖에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서 크게 나타나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임.
  - 공적이전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가처분소득 P10~P20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지니계수와 빈곤율 역시 각각 0.003, 0.7%포인트 감소하였음.
  - 이처럼 공적이전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으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5〉 소득 원천별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

구분	조사 가처분소득	개별 소득 원천 행정 자료 보완 후 가처분소득					전체 보완	
		근로소득 보완	사업소득 보완	재산소득 보완	공적이전 소득 보완	공적이전 지출 보완		
평균(만 원/년)	2723	2873 +149	2767 +44	2811 +87	2742 +19	2686 -38	2981 +258	
10분위 경계값 (만 원/년)	P10	882 -62	820 +15	897 +40	923 +33	915 -29	853 -29	922 +40
	P20	1316 -44	1272 +21	1338 +42	1359 +25	1342 -22	1294 -22	1369 +53
	P30	1684 -6	1678 +24	1708 +43	1726 +16	1700 -20	1664 -20	1783 +100
	P40	2007 +47	2054 +28	2035 +44	2051 +16	2023 -20	1987 -20	2155 +148
	P50	2336 +103	2439 +30	2366 +59	2395 +11	2347 -15	2322 -15	2550 +214
	P60	2689 +166	2855 +42	2731 +59	2748 +14	2703 -18	2671 -18	2971 +282
	P70	3173 +191	3364 +35	3207 +65	3237 +6	3178 -21	3152 -21	3485 +312
	P80	3766 +300	4067 +45	3812 +81	3847 +9	3776 -24	3743 -24	4175 +409
	P90	4742 +421	5163 +77	4819 +146	4888 +27	4768 -8	4734 -8	5281 +540
지니계수	0.346	0.367 +0.021	0.347 +0.001	0.348 +0.002	0.342 -0.003	0.344 -0.001	0.355 +0.009	
빈곤율(% , %p)	16.1	18.9 +2.8	16.0 -0.1	15.8 -0.3	15.4 -0.7	16.5 +0.4	17.6 +1.5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 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빈곤지표는 단계마다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임. 하단의 수치는 조사 가처분소득과의 차이를 의미함. '전체 보완'은 모든 소득 원천을 행정 자료로 보완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7b).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연령대별 소득분배지표 변화(표 6)

- 아동빈곤, 노인빈곤 등 연령대별 소득 분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표 6>에서는 <표 5>와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개인 연령대별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하였음.
- 근로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이 연령대별 소득 분포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
  - 근로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 후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 증가량이 각각 0.032, 0.021로 노인인구의 증가량인 0.007보다 크게 나타났고,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이 각각 5.6%포인트, 2.6%포인트 증가한 것과 달리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0.4%포인트 감소하였음.
  - 근로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는 집단 내 불평등과 빈곤율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노인인구는 집단 내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빈곤율은 감소하였음.
- 공적이전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모든 집단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감소시켰음.
  - 공적이전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 평균과 중위값의 증가량은 노인인구가 가장 컸지만, 지니계수와 빈곤율의 감소량은 연령대별로 대체로 유사하였음.
- 행정 자료 보완의 영향을 모두 종합한 결과,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각각 0.011~0.019, 1.6~4.4%포인트 증가하였고,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2.9%포인트 감소하였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베이로 측정된 소득분배지표가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율을 과소 추정하고 노인인구의 빈곤율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을 시사함.

<표 6> 소득 원천별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

구분		조사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개별 소득 원천 행정 자료 보완 후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변화					전체 보완
			근로소득 보완	사업소득 보완	재산소득 보완	공적이전 소득 보완	공적이전 지출 보완	
개인 0~17세	평균(만 원/년)	2706	+98	+48	+62	+19	-33	+188
	중위값(만 원/년)	2311	+105	+39	+30	+9	+7	+213
	지니계수	0.31	+0.032	+0.002	+0.005	-0.004	-0.003	+0.019
	빈곤율(% , %p)	10.8	+5.6	-0.1	+0.4	-0.9	+0.2	+4.4
개인 18~64세	평균(만 원/년)	2943	+171	+46	+86	+16	-41	+274
	중위값(만 원/년)	2526	+133	+31	+55	+11	-10	+240
	지니계수	0.327	+0.021	+0.001	+0.004	-0.003	-0.001	+0.011
	빈곤율(% , %p)	11.2	+2.6	-0.2	-0.1	-0.6	+0.5	+1.6
개인 65세 이상	평균(만 원/년)	1723	+120	+32	+125	+33	-30	+277
	중위값(만 원/년)	1263	+79	+13	+89	+42	-21	+209
	지니계수	0.425	+0.007	+0.004	-0.001	-0.004	-0.002	-0.003
	빈곤율(% , %p)	46.6	-0.4	-0.1	-1.9	-0.8	+0.2	-2.9

주: 가구원 수 제공근로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 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빈곤율은 단계마다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임. 개별 소득 원천을 행정 자료로 보완한 후의 가처분소득 분배지표와 조사 가처분소득 분배지표의 차이를 제시하였음. '전체 보완'은 모든 소득 원천을 행정 자료로 보완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7b).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 04. 나가며

### ◆ 분석 결과의 요약

- 행정 자료 보완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 자료 보완이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 보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소득 원천별로 살펴보면, 행정 자료 보완이 근로소득 분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고 서베이에서 파악하지 못한 근로소득의 존재가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었음.
- 서베이의 사업소득 무응답을 행정 자료로 대체한 결과 사업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의 사업소득이 일부 포착되었고,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금융소득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음.
- 1차 소득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행정 자료 보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률과 공적연금 평균이 증가하는 영향 등이 관찰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주로 노인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음.

### ◆ 분석 결과의 함의

- 서베이 방식의 소득조사가 실제 소득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표본의 구성이 모집단의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확률적·비확률적 오차,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의 선택적 무응답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음.
  - 둘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소득을 과소 보고(또는 과대 보고)하는 문제가 있음.
- 현재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 자료 보완은 고소득층 누락 등으로 인한 표본 구성 문제에는 대응하지 못하지만, 소득 과소 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소득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공적이전소득의 추가 행정 자료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급여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 외 세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아직까지 행정 자료로 보완하지 않은 공적이전지출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음. 장기적으로 과세행정의 개선과 함께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행정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계속될 필요가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 보완 데이터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스웨덴과 같이 전체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 통계 생산과 학술 연구에 활용하는(신광영, 2017)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표본 구성 문제와 소득 과소·과대 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데이터를 행정 자료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모집단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단, 서구 국가와 달리 한국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고 가구 간 소득이전이 활발하기 때문에 행정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및 지출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 특히 행정 데이터의 통합 수준이 높지 않은 단계에서는 가구 및 개인 특성 등 소득분배 심층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관찰하기 위해 여전히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데이터와 행정 자료를 결합하는 작업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Meyer, Mok, & Sullivan, 2015, pp. 24-25).

## 〈참고문헌〉

- 김낙년. (2012a).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18(3), 75-114.
- 김낙년. (2012b).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125-158.
- 김낙년,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50.
- 신광영. (2017). 스웨덴의 행정 데이터 통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20, 83-108.
- 이원진, 구인회. (2015). 소득분배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한국 소득 데이터의 검토. *조사연구*, 16(4), 27-61.
-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3). 소득분배지표 현황 및 개선방안(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 참고자료). 통계청 보도 참고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7. 7. 인출.
- 통계청. (2017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관련 7문 7답. 통계청 보도 참고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7. 7. 인출.
- 통계청. (2017b).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MDIS, RAS(RAS19092602).
-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 통계청. (2019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 통계청. (2019b).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7. 7.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MDIS, RAS(RAS19092602).
- 홍민기. (2016). 불평등 지표 개선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홍민기. (2017). 보정 지니계수. *경제발전연구*, 23(3), 1-22.
- Meyer, B. D., Mok, W. K. C., & Sullivan, J. X. (2015). *Household Surveys in Crisis*. NBER Working Paper Series, 21399.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집필 이원진(소득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401